

호주의 원주민 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학살의 관점에서 본 태즈매니아 절멸과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

천자현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는 대표적인 다문화사회 호주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원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분열과 화해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호주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공적인 이민 시스템을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완전한 사회적 결속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량 학살이라는 이론틀을 적용하여 '태즈매니아 절멸'과 '도둑맞은 세대'라는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역사적 부정의의 체계적·조직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법 및 보상에 초점을 맞춰 호주 정부의 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그 한계를 찾고, 개선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대량학살이라는 이론틀을 적용하여 호주-원주민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 정책적으로는 앞으로의 화해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한 식민지배 과정에서 나타난 반인륜적 행위와 역사적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은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화해 담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호주뿐만 아니라 과거의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관심과 목표는 정치적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호주, 원주민 학살, 태즈매니아 절멸, 도둑맞은 세대, 화해 정책

* 이 논문은 2023년도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대학 성장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E-mail: jhrene@yonsei.ac.kr)

I. 서 론

호주는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 OECD 회원국 중 해외 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인구 약 2천2백만 명, 270개 민족, 300가지에 달하는 말과 글을 사용하는 나라로, 전체 인구 중 48%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주민이다.¹⁾ 또한 호주는 민족, 인종,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나라다. 따라서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모여들어 호주는 다문화주의와 언어 정책에 있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고 있다 평가받는다(정상우 2008). 이 나라는 다양한 문화로 이뤄진 특성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Lane 2022; Rajadurai 2018).

여러 지표가 호주의 다민족·다문화 정책이 우수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원주민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때로는 원주민 화해 정책으로 인해 사회 분열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호주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화해 정책을 마련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주민과의 갈등은 더 깊어지는 걸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한국 학계가 호주 원주민에 관하여 처음 연구한 주제는 주로 원주민 문화와 생활, 그리고 선교에 있어 한인교회의 역할 등이었다(강재원 2014; 김학유 2005; 성진희 2002). 그러다 1997년 호주 의회에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호주 원주민과 호주 정부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2008년 케빈 러드(Kevin Rudd) 총리는 원주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을 시작으로 호주 정부가 화해 정책들을 마련하자, 국내에서도 2010년부터 호주의 원주민 화해 정책을 연구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강재원 2013; 김범수 2012; 김현준 2017; 문경희 2012; 이전 2012). 이 논문들은 대부분 다문화 정책을 대표하는 한 사례로 ‘호주의 원주민 화해 정책’을 분석했다. 정책이 바뀌고 나아가는 과정을 되짚어 보는 연구들으로써, 한국 학계가 호주와 원주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여러 논문과 보고서가 소개할 만큼 호주 정부는 다양한 화해 정책들을 수립해왔으나, 원주민과의 뿌리 깊은 갈등은 지금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가장 큰

1) <https://www.abs.gov.au/census/guide-census-data/census-dictionary/2021/whats-new-2021>. accessed 05 March 2024

원인은 19세기 유럽 이주민들과 정착민이 자행한 호주 원주민 학살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호주의 원주민 학살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²⁾ 그러나 아직 한국에는 학살의 관점에서 호주 원주민 갈등을 다루는 연구가 거의 없다.³⁾

따라서 이 연구는 호주의 원주민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학살을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원주민 학살을 두 가지 사례-태즈메니아 절멸과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를 통해 분석한다. 끝으로 호주 정부의 원주민 화해 정책을 법제와 보상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국내 정치적 역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학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폭력 및 화해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 고찰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학살의 분류와 기존 논의

‘학살’ 또는 ‘제노사이드’란 인종이나 부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genos*에 살인을 의미하는 라틴어 *cide*를 합친 것으로, 한 민족이나 종족 집단에 대한 절멸을 뜻한다. 물론 이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한 번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학살의 개념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처음 국제연맹에서는 학살을 ‘야만의 범죄’(1933)라 일컬었고, 처칠은 연설에서 ‘이름없는 범죄’(1941)라고 칭했다. 그러다 1946년에 유엔은 제노사이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1948년에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후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제법상 범죄로 공인되었다.

협약은 학살 대상에 대해 민족, 인종, 종족 또는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벌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집단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 그들 삶의 조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것, 집단의 출산을 방해하는 조치, 한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무리에 넘기는 행동을 말한다.

2) <https://c21ch.newcastle.edu.au/colonialmassacres/>. accessed 2 April 2024

3) 최호근은 ‘프린티어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학살과 함께 영국의 태즈메이니아 사람들의 학살 과정을 책으로 엮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난 배경을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저작이나, 학살 이후의 변화나 화해의 정치적 과정은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최호근 2005, 128-142.).

그러나 협약 이후에도 학살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은 최소주의 접근부터 최대 주의까지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학살에 대해 누구보다 앞서 연구한 페인(Fein 1993, 24)은 학살을 가해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 무리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희생자가 항복하거나 위협이 될 만한 능력을 잃었어도 이들에 대한 폭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페인이 정의하는 학살의 특징이다. 한편 카츠(Katz 1994, 128-129)는 제노사이드는 실제 현실에서 한 무리를 물리적인 힘으로 망가뜨리려는 걸 성공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 주장하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즉, 실패했을 때는 집단 학살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니(Charney 1999, 4-5)는 유형이나 특성을 자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모든 집단 학살 사건은 제노사이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카츠와 달리 최대주의적 접근법을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 제노사이드 연구자인 최호근(2005)은 앞선 개념들을 받아들여 학살을 ‘인종, 민족, 종족, 종교의 차이나 정치·사회 이해관계 간에 충돌, 또는 경제 이해관계 따위를 이유로 특정 집단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잠정적으로 정의한다.

호주 원주민 학살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라이언은 한 번의 작전으로 여섯 명이 넘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일부러 죽이는 것을 학살로 정의했다.⁴⁾ 과거 원주민 대부분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은 사냥꾼과 채집꾼으로 스무 명가량 무리를 지어 활동했다. 한 번에 무방비 상태인 여섯 사람(전체 무리의 30%) 이상을 죽이면 무리 전체에 즉각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를 ‘프랙탈 학살’이라고 한다(Mann 2018, 167-183). 무리의 생존자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이어지는 공격에 무기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표 1〉 식민지 개척지 학살 사건 수

호주 식민지 학살 사건 주요 내용	사건 횟수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 학살	416
정착민 학살	13
이 밖의 학살	2
정착민에 의한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 학살	408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에 의한 정착민 학살	13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 간 학살	5

출처: The Center for 21st century Humanities, The University of New Castle, Australia

4) <https://c21ch.newcastle.edu.au/colonialmassacres/>. accessed 2 April 2024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한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살을 식민지 학살(colonial genocide) 또는 개척지 학살(frontier genocide)이라 한다. 유럽인들이 새로운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살은 3단계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1단계는 식민지 개척지로의 침입, 2단계는 원주민을 없애는 것, 마지막 3단계는 살아남은 원주민을 보호 구역이라 하는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다(장예나 2017; 최호근 2005). 이들의 목적은 희생자(원주민)를 절멸시키거나 생존자를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에 있다.

개척지 전쟁(Frontier War)은 유럽인들이 호주에 정착한 초기 140년간 벌인 전쟁을 뜻한다. 당시 호주에 온 유럽인들은 영국의 식민지 확장과 통치의 공고화를 위해 원주민 학살을 자행했다. 1788년~1928년 사이 11만 명에서 14만 명의 원주민이 죽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경찰이나 정부 권력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Ryan 1989). 한편, 호주에서 일어난 개척지 학살은 크게 ‘보복 학살’과 ‘기회 학살’로 나눌 수 있다. 보복 학살은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섬 사람이 정착지 주민을 죽였거나 정착지 주민을 납치한 경우, 정착지 주민의 가축을 살해 또는 빼앗았을 때, 음식과 장비를 훔치거나 식민지 재산에 대해 방화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기회 학살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저지르는 학살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착민들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지역에서 원주민을 ‘청소(cleansing)’하는 경우가 기회 학살에 속한다.⁵⁾

이와 같은 기존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살의 조건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이러한 호주 원주민 학살 사건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절멸의 의도를 갖고 특정 집단 일부 혹은 전체에 폭력을 행하는 행위
- (2) 특정 집단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행위

III. 호주 원주민 학살의 역사적 사례

1. ‘검은 전쟁’과 태즈메니아 원주민 절멸(extermination)

호주 원주민은 호주 대륙에 6만 5천 년이 넘게 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 <https://c21ch.newcastle.edu.au/colonialmassacres/>. accessed 2 April 2024

1788년 영국 식민화 이전에는 75만~125만 명의 원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인종학적으로 애보리지널(Aboriginal)과 토레스 해협 섬의 주민(Torres Strait Islanders)로 나뉜다. 애보리지널은 250가지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류학자들은 이들 조상이 같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 반면 토레스 해협 섬의 사람들은 6만여 명이며, 뉴기니나 멜리네시아 계통으로 애보리지널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한편 호주 남쪽에 있는 태즈메이니아의 원래 이름은 반 디멘즈 섬(Van Diemen's Land)으로, 약 4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⁶⁾ 그러나 1803년 ‘주인 없는 땅(terra nullius)’이라는 원칙을 주장하며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을 부정하고, 식민지 개척의 타당성을 주장했다.⁷⁾ 이 일로 태즈메이니아에서 영국인이 저지른 학살은 식민지 개척지 학살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한 절멸을 초래한 사건이었다.⁸⁾ 식민화가 시작된 시기 원주민의 수는 1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 뒤로 정착민에 의해 들어온 전염병과 물리적·폭력적 공격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기 시작하여, 70년 만에 원주민은 절멸한 것으로 알려졌다(Lawson 2014). 정착민들이 국경선을 점점 넓혀감에 따라 계속해서 원주민 땅을 넘어가게 되었고, 폭력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1824년에는 11건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지만 1827년에는 72건, 이듬해인 1828년에는 144건, 1830년에는 222건의 폭력 사건이 있었다(Lawson 2014, 45-46).⁹⁾

결국 1826년 11월 조지 아서(George Arthur) 총독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원주민을 상대로 ‘검은 선(Black Line)’이라는 군사 전략을 시행했다.¹⁰⁾ 검은 선 전략은 군인과 경찰로 이뤄진 인간 띠를 만들어서 원주민들을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총을 쓰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냥과 크게 다를 바가

-
- 6) 호주 대륙에는 1788년 영국의 식민화 이전에 75만~125만 명의 원주민이 살았던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원주민 인구는 98만 명으로 호주 총인구의 3.8%에 불과하다(박차영 2023).
- 7) ‘무주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기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유럽 정착민들의 원주민을 향한 시선이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 8) 개척지 학살 중, 16~19세기에 걸친 아프리카 노예무역 과정에서 당시 아프리카인의 5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명이 학살되었고, 같은 시기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95%에 달하는 5천만~1억 명이 학살되었다.
- 9) 이러한 기록은 정착민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착민들이 자기들이 주도한 공격은 빼고, 원주민이 공격한 일만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폭력 사건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Lawson 2014, 46).
- 10) 이 계엄령은 식민지 개발과 정착민 보호를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1825년 지침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Lawson 2014, 48).

없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장예나 2017). 이때 원주민 성인 한 사람에게 5파운드, 어린이 한 사람에게 2파운드의 포상금이 걸려있어 정착민들은 더욱 열심히 원주민들을 찾고, 잡으려 했다. 그 뒤로 원주민과 정착민 사이에 ‘검은 전쟁(Black War)’이 일어나 다시 한번 원주민의 수가 빠르게 줄었다.

그리고 다시 Friendly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플린더스 섬(Flinders Island)의 와이발레나(Wybalenna) 캠프에 원주민을 강제로 옮기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때 아서 총독은 런던에 꾸준히 편지를 보내 상황을 보고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는데,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혹한 조치를 선택지로...원주민을 섬 일부에 가두어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며...그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고, 부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계획...원주민들은 그들의 습관이 문명화될 때까지 섬의 정착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배제 될 것...”(Lawson 2014, 48-49)

식민지 정부는 원주민들이 플린더스 섬으로 이주하면 먹을 것과 집,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착 플린더스 섬의 와이발레나 캠프는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적합한 주거 시설이 없었으며,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인플루엔자와 결핵,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려 아프거나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병원과 의료시설도 갖춰지지 않았고, 추위를 막아줄 옷도 주지 않았다(장예나 2017, 30). 1847년에는 와이발레나 캠프마저 문을 닫고, 살아남은 태즈메니아 원주민 마흔여덟 명은 또다시 강제로 오이스터 코브(Oyster Cove)로 옮겨 가게 되었다. 이곳 역시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고, 필요한 물자를 받지 못해 1859년에 태즈메니아 원주민은 열두 명만이 살아남았다(Lawson 2014; Ryan 1989, 251). 1803년 식민지 개척을 시작으로 태즈메니아에서 일어난 검은 전쟁, 강제 이주 정책, 질병과 학살로 희생되었던 태즈메니아 원주민들은 빠르게 수가 줄어 1870년 마지막 순수 혈통인 트루가니니(Truganini)의 죽음을 끝으로 절멸했다.

태즈메니아 원주민이 절멸할 것이라는 주장은 1920년대 중반부터 영국과 호주 사이에서 널리 자리 잡은 하나의 담론이었다. 이는 1930년대에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으며, 태즈메니아 뿐만 아니라 다른 호주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도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착민과 식민지 정부, 영국 정부는 책임을 부인했고, ‘보호에 실패’했다는 정도로만 해석하였다. 총독은 나중에 슬회하기를 “원주민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고, 협동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이대로는 아무것도 없다(as it is, there is none).”고 했다(Lawson

2014, 114).

태즈메니아 원주민 학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총독을 비롯한 식민지 정부와 영국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어디까지나 정착민들이 갑작스럽게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호주에서의 개척지 학살 발생을 부인한다. 그러나 총독이 런던에 보낸 편지, 계엄령 선포, 원주민과 정착민의 강제 분리 조치에 승인한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격하지는 않았더라도 분명히 학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과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영국의 허스키슨(Huskisson) 국무장관과 머레이(Murray) 사령관도 태즈메니아 식민지 정부에 서한을 보내 영국 정부의 우선순위를 확인한 바 있다.

“태즈메니아 땅 전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유목 생활을 하고자 하는 태즈메니아 원주민의 열망과 정착지를 넓히려는 영국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영국 정부는 절대적인 힘(absolute force)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있고...정착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security of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settlers)이 식민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Lawson 2014, 49-50)

식민지 개발 회사 직원들에게 총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총(musket)보다 권총(pistols)이 휴대하기 편하므로 정착지에 권총을 보내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령이 총독부와 식민지 개발 회사로 직접 내려오기도 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원주민과 적대적인 만남을 갖지 말고 우정(friendship)과 화해(conciliation)를 키우기 위해 전쟁 무기를 사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Lawson 2014, 62-63). 1840년대에 이르러서 영국의 스탠리(Stanley) 국무장관은 보호령 제도가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태즈메니아 식민지 정부 총독에게 서한을 보내 위기를 해결할 책임을 식민지 정부에 넘겼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기독교 교리가 들어맞지 않으며 문명의 이로운 점이 전달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이 개선될 수 없으며...멸종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필연...”(Stanley 1842, 221)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태즈메니아 원주민 학살은 정착민의 보호와 식민지

개발을 위해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몇 사람의 도발과 일탈이 아닌, 총기 사용을 허가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원주민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또한 태즈메니아 식민지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직접 원주민 학살 명령을 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를 개발하는 가운데 걸림돌이 된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모두 목숨을 잃을 때까지 내버려 둔 것은 암묵적 승인이라고 볼 수 있다(송광현 2020; Lawson 2014, 63-64).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뒤늦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때다.

2. 원주민 어린이 강제 이주,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 그 이후

‘도둑맞은 세대’(Stolen Generation)는 180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사이에 시행된 호주 정부의 정책으로 원주민 자녀들을 강제로 분리한 것을 일컫는다. 1860년대에 빅토리아주는 원주민 자녀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놓는 것을 허락하는 법을 제정했고, 1900년대에 수립된 연방 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 세기 동안 수천 명의 원주민 어린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납치되었고, 그들 중 많은 어린이가 영원히 부모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1910년부터 1970년 사이 원주민 어린이 열 명 가운데 한 명, 지역에 따라서 많게는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Allan & Collard 2023). 이 어린이들은 ‘도둑맞은 세대’ 또는 ‘도둑맞은 아이들’로 알려져있다. 원주민 아이들은 등하곳길과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납치되었는데, 이들을 납치한 사람은 주 정부 경찰 또는 연방 정부의 경찰들이었다. 어린이들은 납치된 후, 480개가 넘는 정부 기관에 배정되어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입양되거나, 백인 가정의 노예로 살기도 했다. 납치된 원주민 아이들은 고유의 원주민 문화를 누릴 수 없게 강요받았고, 토착 언어도 쓸 수 없었으며 영어가 아닌 말을 쓰면 물리적 처벌을 받았다.

호주 정부가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 이주시킨 까닭은 원주민 문화를 제거하고, 이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문화적 학살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 집단의 언어, 문화, 종교, 사회 제도를 전멸시킬 목적을 갖고 파괴하는 정책이다. 원주민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혈통이 열등하다고 세뇌당했으며, 부모가 죽었거나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믿도록 세뇌당하기도 했다. 이들 세대는 원주민과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가난하며 건강, 주택, 고용률, 가족 관계에 있어 눈에 띄게 나쁜 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 어린이를 강제로 격리하는 일이 최근에도 진행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원주민 아동 보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20,421명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의 어린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원주민이 아닌 어린이보다 열 배가 넘는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시설이 갖는 목적이 과연 원주민 어린이 ‘보호’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지역의 보호 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 수는 ‘도둑맞은 세대’를 통틀어 사라지거나 제거된 아이들의 수를 넘어섰다.¹¹⁾ 심지어 뉴사우스 웨일즈(NSW) 정부는 방치된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 입양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2세 미만의 아동은 주 정부가 판단하여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Pilger 2014).

〈표 2〉 원주민 어린이와 비원주민 어린이의 가정 밖 보육 현황 비교(2018년 6월 30일 기준)

주(State) / per 1,000 children	원주민 어린이	비원주민 어린이	전체 어린이	비율 (원주민 어린이/ 비원주민 어린이)
뉴사우스웨일즈	71.2	6.4	9.8	11.2
빅토리아	88.8	4.3	5.7	20.5
퀸즐랜드	41.5	4.9	7.8	8.5
서호주	64.4	3.6	7.4	18.1
남호주	72.9	6.9	10.1	10.6
태즈메니아	자료 없음	자료 없음	11.3	자료 없음
호주 수도 특별 구	101.4	6.2	8.8	16.3
노던 테리토리	35.6	3.2	17.0	11.2

출처: (<https://www.snaicc.org.au/wp-content/uploads/2024/07/20240731-Family-Matters-Report-2023.pdf>, accessed 10 March 2024)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1) 호주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산업이라는 점과 연관시키는 관점도 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교육 전문가, 의료 전문가, 심리학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호주 사람들이 ‘원주민 불이익’과 과잉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https://www.snaicc.org.au/wp-content/uploads/2024/07/20240731-Family-Matters-Report-2023.pdf>, accessed 10 March 2024

<표 2>는 가정 밖에서 보호받는 원주민 어린이와 비원주민 어린이의 수, 그리고 그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같은 통계로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의 어린이는 비원주민 어린이들과 견주어 보호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압도적으로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정책과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빈곤, 동화 정책, 세대 간 트라우마와 차별, 아동 강제 퇴거 등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의 어린이 과잉보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¹²⁾

위와 같이 원주민 어린이들이 여전히 가정이 아니라 밖에서 ‘보호’받는 까닭은, 지난날 강제 이주와 동화 정책의 유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사람들은 역사적 부정의를 겪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소유권 박탈, 소외와 인종 차별에 이르기까지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내면화된 트라우마는 다음 세대로도 이어져 빈곤과 폭력, 아동 학대와 방임 등 사회 문제로 굳어져가고 있는 것이다(Atkinson 2002; Fien & Charlesworth 2012; Funston 2013; Robertson 2000; Silburn et al. 2006; Sorensen et al. 2010).

IV. 호주 정부의 원주민 화해 정책

1. 법·제도적 정책 시도

(1) ‘보이스’(VOICE) 설치 논의

‘보이스(Voice)’는 호주 원주민의 목소리가 호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정권의 교체에 따라 폐지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구로 고안되었다. 이는 호주 원주민의 고유한 지위와 자결권을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첫 단계가 될 것으로 주목받아왔다. ‘보이스’는 호주 의회와 정부에 대한 자문 기관, 지역 및 국가 기관을 대표하는 역할, 원주민 커뮤니티에 정치 과정에서의 권한 부여 및 자결권 등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자문 기관으로서 원주민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와 피드

12) <https://humanrights.gov.au/our-work/projects/bringing-them-home-report-1997>. accessed 11 March 2024;

<https://aifs.gov.au/resources/policy-and-practice-papers/child-protection-and-aboriginal-and-torres-strait-islander>. accessed 08 February 2024

백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¹³⁾ 둘째, 원주민 지역의 목소리는 폴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원주민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연방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목소리'로 반영될 것을 인정한다. 셋째, 호주 원주민에게 정치 과정에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원주민이 배제된 역사적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이스’에 대한 입법 제안 이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개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호주 원주민이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지지자들은 ‘보이스’ 기구의 설치가 호주에서 정의와 화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주장해왔다. ‘보이스’는 과거의 잘못을 해결하고, 원주민과 비원주민 간의 사회적·경제적 격차를 줄이며, 원주민 문화와 역사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적·제도적 노력임과 동시에 원주민 화해를 위한 광범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국민투표 실행

2023년 10월 14일, 호주는 원주민을 대변할 헌법 기구인 ‘보이스(Voice)’ 설립을 앞두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¹⁴⁾

국민투표 법안: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을 위한 목소리(Voice) 시설을 신설하여 호주 원주민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변경하는 법안입니다.

이 개헌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투표로 호주 사람들에게 승인을 요청한 법안은 헌법에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었다.

13) 다만, 이에 대한 거부권은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4) 호주 6개 주 가운데 3분의 2인 4개 주에서 절반 넘게 지지를 얻어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제9장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에 대한 인정

129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들의 목소리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들을 호주의 첫 번째 국민(First Peoples)으로 인정한다.

I.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을 위해 목소리(Voice)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어야 한다.

II.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들은 목소리(Voice)를 통해 이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방 의회와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회는 이 헌법에 따라 의회의 구성, 기능, 권한과 절차를 포함하여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의 목소리(Voice)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상 원주민의 지위가 나아지길 기대할 만한 투표였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들에게 호주 의회와 행정부에 중요한 입법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이로써 이들에게 발언권이 생기고,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권리가 커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핵심 기구가 바로 목소리(Voice)이며 이 기구의 설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가 국민투표의 핵심이기도 했다. 목소리(Voice)의 원칙(principles)은 다음과 같다.

<독립적 조언 제공>

목소리(Voice)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의 섬 주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목소리(Voice)는 선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Voice)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표 요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Voice)는 연구, 개발 및 대변을 위한 자체 자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제안된 법률과 정책을 개발할 때 초기에 보이스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위원 선출>

목소리(Voice)의 위원은 행정부가 임명하지 않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 커뮤니티에서 뽑습니다.

위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목소리(Voice)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문화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해 목소리(Voice) 위원의 선출 방식은 지역사회의 희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투표 이후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목소리(Voice) 위원의 대표성>

성별 균형을 이루며, 청소년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소리(Voice) 구성원은 원주민 또는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이어야 합니다.

위원은 각 주, 테리토리와 토레스 해협 제도에서 선정합니다.

목소리(Voice)에는 본토 토레스 해협 섬 주민 대표뿐만 아니라 특정 외딴 지역 대표도 포함될 것입니다.

목소리(Voice)는 전국 차원에서 균형 잡힌 성별 대표성을 갖출 것입니다.

<목소리(Voice)의 플랫폼 역할>

목소리(Voice) 구성원은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커뮤니티의 의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목소리(Voice)는 풀뿌리 커뮤니티 또는 지역 단체와 협의하여 역사적으로 참여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포함하여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책임감과 투명성>

목소리(Voice)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 거버넌스와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목소리(Voice) 멤버는 국가부패방지위원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목소리(Voice) 멤버는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제재받거나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 외>

목소리(Voice)는 기존 조직의 업무 존중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자금을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Voice)는 거부권을 갖지 않습니다.

(3) ‘보이스(VOICE)’ 설치 실패

호주 헌법에 원주민 자문기구인 ‘보이스’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반대 약 60%, 찬성 약 40%로 호주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부결되었다. 호주 국민들은 ‘보이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이 기구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가지거나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일부 호주 국민들은 원주민을 위한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구의 설치가 오히려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보이스’ 설치에 대한 논의가 거듭됨으로써 정치적 이슈로 부각 되었으며, 당파적 분열에 따라 주요 정당들이 반대 입장을 보인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자유당과 국민당을 포함한 이 외 보수 단체들은 ‘보이스’ 반대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이 기구의 설치는 불필요하며 오히려 국가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민들에게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보이스’ 설치에 대한 초당적 지지의 부재는 국민 투표 부결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동안 실시된 국민투표의 결과들을 보면, 1901년 연방 설립 이후 44번의 국민투표 중 8번만 통과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원주민과 관련한 국민투표로는 1967년 원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 이후,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가 없으면 국민투표 통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보이스’ 설치에 대한 국민 투표 부결은 호주의 국가적 화해 과정에서 하나의 좌절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원주민 지도자들과 옹호자들이 결과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호주 사회 및 정치적으로 토론이 촉발되었으며, 헌법적 변화 없이도 원주민 불평등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자는 등의 목소리들이 제안되고 있다.

2. 원주민 피해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보상과 그 한계

‘도둑맞은 세대’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고, 국가의 주도적 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 조사위원회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시행되어야 할 것을 권고했다.¹⁵⁾

15) <https://humanrights.gov.au/our-work/projects/bringing-them-home-report-1997>. accessed 11 March 2024.

그러나 당시 하워드(Howard) 총리는 이전 세대의 잘못을 지금 세대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점, 이전 세대는 그들의 행동이 합법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었다는 점, 원주민에게 사과하면 정부가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과와 직접 보상 법안 제정에 반대했다.¹⁶⁾ 그는 대신 기록에 대한 접근성 향상,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가족 만남을 위한 서비스, 언어와 문화 유지 지원과 상담, 정서·사회적 복지 등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practical assistance)을 강조하며 6천3백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했다.¹⁷⁾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주민 사회로부터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7년 선거 후, 새 총리인 케빈 러드(Kevin Rudd)는 2008년 2월 13일 ‘도둑맞은 세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¹⁸⁾ 야당 지도자인 브렌든 넬슨(Brendan Nelson) 역시 연립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사과를 전하며 러드 총리의 사과를 지지했다.¹⁹⁾ 이에 호주 녹색당은 상원에서 보상을 약속하는 수정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노동당과 연립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Brown 2008, 93). 결국 정부는 공식적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고, 대신 국가 사과 1주년을 맞이하여 ‘원주민 치유 재단’(Indigenous Healing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트라우마 치유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와 실천을 촉진 시키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많은 치유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다. 그리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트라우마가 사회와 건강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증거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다.

공식적 보상 법안 마련을 거부하는 연방정부의 원칙에 따라, 원주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주 정부 단위에서 이뤄졌다. 보상 금액과 방법도 주(지역)마다 다르게 집행되었다. 남호주 정부는 호주 달러로 1천1백만 규모의 배상 기금(Fund)을 마련하여 ‘도둑맞은 세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이 치유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²⁰⁾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7천380만 호

16) 이로부터 11년 후인 2008년에 러드(Rudd) 총리에 의해 정부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다.

17) <https://humanrights.gov.au/our-work/projects/bringing-them-home-report-1997>. accessed 11 March 2024

18)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public-diplomacy/programs-activities/Pages/speech-by-prime-minister-kevin-rudd-to-the-parliament>. accessed 10 March 2024

19)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public-diplomacy/programs-activities/Pages/we-are-sorry-address-to-parliament>. accessed 10 March 2024

20) https://www.reconciliation.org.au/wp-content/uploads/2021/03/State-of-Reconciliation-Report_FULL.pdf. accessed 10 March 2024

주 달러(약 64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여기에는 살아남은 피해자들 한 사람 앞에 7만5천 호주달러(약 6천500만 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날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수천 명의 원주민 어린이가 가족에게서 강제로 분리됐으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피해자는 약 730명 정도다.

태즈메니아는 2006년에 5백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도둑맞은 세대에 속하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유일한 주 정부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빅토리아 주는 2027년 3월까지 보상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보상금 10만 호주달러와 함께 주 정부의 사과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식적인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2021년부터 4천~6천 명의 도둑맞은 세대의 피해자가 집단 소송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²¹⁾ 그러나 이들은 이미 1990년대에 연방 정부의 책임과 정책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두 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표 3〉 지역(주)별 원주민 피해 보상 규모와 수혜자 수

지역(주) 이름	총예산 (단위: AUD)	청구 건수	수혜자 수	특이 사항
태즈메니아	5백만	151건	106명	주 법안 제정 the Stolen Generations of Aboriginal Children Act 2006 (the Act)
퀸즐랜드	1억	10,200건 (원주민: 5,406건)	7,400명	주 정부 보육시설에서 학대 받은 피해자를 포함한 포괄 적 보상(비원주민 포함)
서호주	1억 4,400만	자료 없음	5,333명 (원주민: 2,667명)	어린이 학대를 포함한 포괄 적 보상(비원주민 포함)
남호주	1,100만	449	343명	보상 조건: 추가 소송 면제 합의 증서에 서명
뉴사우스웨일즈	7,300만	1,100	330명	
빅토리아	1,000만	미정	1,200명 (예상)	2020년에 보상 계획 발표 후, 지급도 진행 중

출처: 각 지역(주)별 보상 발표를 조사하여 저자가 구성

21) <https://www.shine.com.au/media/media-releases/settlement-for-thousands-of-stolen-wages-workers-in-the-northern-territory-of-up-to-202-million>. accessed 30 August 2024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둑맞은 세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가 중심이 되어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마다 보상 규모와 수혜 조건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책임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1년 모리슨 총리는 배상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3억 7,860만 호주달러를 배정할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7만 5천 호주달러의 일회성 지급금이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배상 기금은 비원주민들에 비해 대부분의 경제적·사회적 지표에서 가장 하위계층에 있는 70만 명의 원주민이 당면한 불이익을 해결하고자, 연방 정부가 계획한 10억 호주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²²⁾

이는 원주민 커뮤니티가 오랫동안 연방 정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청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호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보상은 법제화가 아닌 행정적 조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호주 원주민청(NIAA)이 제도의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이니셔티브의 자세한 사항들까지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아닌, 정책의 성격을 띠는 약속에 머물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정권이 바뀌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지침들 역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논리로, 호주 정부는 강제 이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일회성 배상금으로 7천5백만 호주달러를, 일회성 치유 지원금으로 7천 호주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법화 이전까지는 이러한 약속을 지킬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V. 결 론

2024년 1월 26일,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시드니에 모여 원주민의 주권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침략의 날’ 집회를 열었다. 1월 26일은 호주의 가장 큰 국가기념일로 1788년 1월 26일에 1천 4백여 명의 죄수와 군인,

22) 연방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비원주민보다 8년 정도 짧으며,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원주민 어린이가 비원주민 청소년보다 가정 밖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11배 더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https://humanrights.gov.au/our-work/aboriginal-and-torres-strait-islander-social-justice/publications/close-gap-2021>. accessed 11 March 2024).

이주민을 태운 영국 함대가 호주에 상륙한 것을 기리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호주 원주민들에게 이날은 ‘침략의 날’ 또는 ‘애도의 날’이기도 하다. 이같은 논쟁과 갈등은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1월 26일을 공무원 휴일로 정하고, 호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 정부마다 반드시 이날 시민권 수여식을 열도록 해왔다. 그러나 노동당이 집권 이후, 공공서비스 휴무령과 함께 시민권 수여식도 각 자치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제인 흄(Jane Hume) 상원의원은 노동당이 일부러 호주의 날을 훼손하고 있다며, 노동당이 “우리의 공통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했다(Tariq 2023). 한편, 빅토리아주에 있는 100년 된 쿡 선장 동상이 훼손된 사건 역시 ‘호주의 날’에 대한 항의로 이해되고 있다. 동상은 발목이 잘려 나갔고, 동상 받침대에 ‘식민지는 무너질 것이다’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쓰여 있다. 멜버른의 쿡 빅토리아 정원에 있는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에 붉은 페인트를 칠한 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다양한 민족 구성과 이민자 포용정책을 갖춘 다문화국가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정책을 둘러싼 호주의 사회적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호주 사회가 원주민과의 뿌리 깊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원인을 역사적 사건인 학살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해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은 식민지 개척 시기 동안 발생한 가슴 아픈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정의롭지 못한 역사, 특히 원주민 학살과 절멸, 원주민 어린이를 강제 이주시킨 일을 포함하여 호주가 식민지 시대에 저지른 잔인한 일들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주목한 본 연구는 ‘학살’의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태즈메니아 원주민 절멸과 ‘도둑맞은 세대’ 사례를 집중해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식민지 개척 시기 동안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이 원주민에게 자행한 여러 가지 물리적 행위가 대량 학살의 정의와 어떻게 맞닿는가를 보여주려 하였다. 또한 입법과 보상 측면에서 호주 정부가 수립한 화해 정책을 분석하여 그 한계를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호주의 각 주 정부들이 기금과 재단을 설립하고 보상에 대한 계획을 발표거나 다양한 화해 정책을 펼치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분열이 계속되는 것은 호주의 원주민 화해 정책이 법적·제도적 장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집권당에 따라 달라지는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정치적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나서서 안정적인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일관성있게 개선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갖는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지속성과 권한, 법적 기반의 변화, 인사 및 조직 구성 변화로 인해 활동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범위와 권한이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조사 대상, 기간,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 이외에도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집권 정부의 이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문제를 둘러싼 공적 내러티브의 변화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때때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관심과 목표는 정치적 역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불의를 처리하는 방법과 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사적 부정을 해결하려는 집단 간 화해의 과정은 역사 갈등을 해결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이해와 신뢰를 쌓아야 하기에 다양한 층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지난한 과정이다. 지난날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와 사회를 회복시키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피해자들의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길고 지난한 과정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뢰를 쌓고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한 번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비록 호주에서 시행된 2023년 국민투표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목소리(VOICE) 설립에 실패했지만, 앞으로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정책을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노력이 계속 된다면, 호주의 다문화 사회의 장점과 다문화 정책 입안 경험을 바탕으로, 원주민 커뮤니티와도 화해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호주 정부의 화해 정책이 분석 대상이었기 때문에, 원주민 학살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한 호주 시민사회와 개인들의 다양한 노력은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국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변화한 국민이 정부를 움직여 보상 법안 등 제도적 변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과정이 정부의 큰 한 걸음보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 시민사회와 개인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학살 사건이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서의 화해 과정을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재원. 2013. “호주의 정체성에 나타난 원주민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와 확장성에 대한 문제점.” 『역사문화연구』 47, 235-270.
- _____. 2014. “호주 원주민선교의 이해와 한인교회의 역할.” 『신학과 실천』 38, 595-623.
- 김범수. 2012. “‘호주인’의 경계 설정.” 『아시아리뷰』 2(1), 207-244.
- 김학유. 2005. “호주 원주민과 기독교 선교(1).” 『신학정론』 23(2), 223-252.
- 김현준. 2017.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국가 유산’으로부터 국가 사과와 날까지: 호주 원주민 정책의 변화.” 『동서연구』 29(1), 23-47.
- 문경희. 2012. “호주의 원주민 화해 정치: 공식 사회와 실질적 화해 논의를 중심으로.” 『민족 연구』 49호, 18-49.
- 박차영. 2023. “원주민에 대한 원죄 인정하기 싫은 호주.” 『아틀라스』 (10월 17일),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6> (2024/03/10 검색).
- 송광현. 2020. “호주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절멸과 제노사이드 논쟁.”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진희. 2002. “호주원주민 회화를 모티브로 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전. 2012. “호주 원주민의 기원과 특성, 그리고 호주 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관한 일고찰.” 『사회과학연구』 30호, 5-27.
- 장예나. 2017. “영국의 인간유해 수집에서 반환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원주민 사례.” *HOMO MIGRANS* 17, 31-61.
- 정상우. 2008.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 『외국법제연구』, 85-94.
- 최호근. 2005.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영문 자료

- Australia Bureau of Statistics. 2021.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ictionary.” <https://www.abs.gov.au/census/guide-census-data/census-dictionary/2021/whats-new-2021> (accessed 05 March 2024).
-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1997. “Bringing Them Home Report.” December 16, <https://humanrights.gov.au/our-work/projects/>

- bringing-them-home-report-1997 (accessed 11 March 2024).
- _____. 2021. "Close the Gap Report." <https://humanrights.gov.au/our-work/aboriginal-and-torres-strait-islander-social-justice/publications/close-gap-2021> (accessed 11 March 2024).
- Charney, Israel W. 1999. *The encyclopedia of genocide (Vol.1 and 2)*. Santa Barbara: ABC-Clio.
- Fein, Helen. 1993. *Genocide: A Sociological Perspective*. London: Sage Publications.
- Katz, Steven T. 1994. *The Holocaust in Historical Contex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ane, Isavelle. 2022 "A great strength for Australian society: Multicultural leaders praise nations growing diversity." *SBS News*, June 28, <https://www.sbs.com.au/news/article/a-great-strength-for-australian-society-multicultural-leaders-praise-nations-growing-diversity/hzfoglcda> (accessed 12 March 2024).
- Lawson, Tom. 2014. *The Last Man: A British Genocide in Tasmania*.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Mann, Michael. 2018. "Have wars and violence declined?" *Theory and Society* 47, 37-60.
- National Indigenous Australians Agency. 2023. "Design principles of th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Voice." <https://apo.org.au/sites/default/files/resource-files/2023-03/apo-nid322145.pdf> (accessed 11 March 2024).
- Nelson, B. 2008. "[Speech] Apology to Australia's Indigenous peoples." IHF website, February 13,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public-diplomacy/programs-activities/Pages/we-are-sorry-address-to-parliament> (accessed 10 March 2024).
- Pilger, John. 2014. "Another stolen generation: how Australia still wrecks Aboriginal families." *The Guardian*, March 21.
- Rajadurai, Esther. 2018. "Success in Diversity: The Strength of Australia's Multiculturalism." Ideas Forum, The Mckell Institute.
- Reconciliation Australia. 2016. "Ambiguous, Challenging, and Progressive." Annual Review 2015-2016, <https://www.reconciliation.org.au/wp-cont>

- ent/uploads/2021/03/State-of-Reconciliation-Report_FULLL.pdf (accessed 10 March 2024).
- Rudd, Kevin. 2008. “[Speech] Apology to Australia's Indigenous peoples.” speech. IHF website, February 13,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public-diplomacy/programs-activities/Pages/speech-by-prime-minister-kevin-rudd-to-the-parliament> (accessed 10 March 2024).
- Ryan, Lyndall. 1989. *Tasmanian Aborigines*. St. Leonards: Allen & Unwin.
- Ryan, Lyndall et al. 2023. “The Center for 21st century Humanities, The University of New Castle, Australia.” <https://c21ch.newcastle.edu.au/colonialmassacres/> (accessed 2 April 2024).
- SNAICC & National Voice for our Children. 2023. “The Family Matters Report.” <https://www.snaicc.org.au/wp-content/uploads/2024/07/20240731-Family-Matters-Report-2023.pdf> (accessed 10 March 2024).
- Shine, Lawyers. 2021. “Settlement for thousands of Stolen Wages workers in the Northern Territory of up to \$202 million.” <https://www.shine.com.au/media/media-releases/settlement-for-thousands-of-stolen-wages-workers-in-the-northern-territory-of-up-to-202-million> (accessed 30 August 2024)
- Stanley, William. 1842. “Lort Stanley's Speech.” *The Sydney Morning Herald*, August 1.
- Tariq, Sofia. 2023. “Liberal Senator Jane Hume urges government to reverse APS Australia Day rule.” *The Canberra Times*, January 19,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8052874/liberals-urge-government-to-reverse-aps-australia-day-rule/> (accessed 12 June 2024).

판례

- Kruger v Commonwealth (1997) 190 CLR 1, [1997] HCA 27; Cubillo and Gunner v Commonwealth (strike out application) (1999) 89 FCR 528, [1999] FCA 518

Abstract

**A Critical Analysis of Australia's Indigenous
Reconciliation Policy**
**- The Extermination of Tasmania and the Stolen Generation
from a Genocidal Perspective**

Jahyun Chun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ocial divisions and reconciliation policies resulting from the conflict with Indigenous peoples in Australia, a typical multicultural society. Despite Australia's successful immigration system, which is open to all regardless of ethnicity, race, gender, or religion, the country's ongoing conflict with Indigenous peoples prevents full social cohesion. This study applies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genocide to analyze the major cases of the 'Tasmanian Extermination' and the 'Stolen Generation', and examines the systemic and pervasive nature of historical injustices against Indigenous communities. It also critically examines the Australian government's reconciliation policies, focusing on legislation and reparations, to identify their limitations and highlight areas for improvement and practical action. Therefore, this study contributes academically by apply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genocide to the analysis of Australian-Indigenous relations, and politically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conciliation policie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conciliation discourse that is actively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overcoming the inhumane acts and historical injustices that occurred during colonization is not only an Australian issue.

Key Words: Australia, Indigenous Policy, Genocide, Tasmania Extermination, Stolen Generation

□ 논문접수일: 2024년 7월 12일, 심사완료일: 2024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25일